



NH 사건은 정부 부패와 시장의 합작품이다

관련 기사 16면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2021년 국내외 정세

6~11면

N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16면

이익공유제
서민 지원 효과 없고
노사협조주의
퍼뜨린다

5면

알렉스 캘리니코프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15면

미얀마
더욱 거세진 군부의 공격
무장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14면

로자 룩셈부르크 탄생
150주년
개혁을 위한 투쟁은
혁명적 근육을
키우는 수단이 돼야

12~13면

변희수·김기홍 씨의
안타까운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개선 없는
트랜스젠더 차별

4면

한파 속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땀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

임준형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행 씨가 한파 속에 숙소에서 사망했다.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직후 문재인 정부는 숙소를 농지 위에 설치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놔다. 그러나 설치 위치가 농지만 아니면 여전히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으로 만든 가건물을 열악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

〈BBC〉, 〈위싱턴 포스트〉 등 해외 언론에도 해당 사건이 보도되고 논란이 계속되자, 3월 2일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일부 확대해 주는 방침 등 추가 대책을 내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의 방침이 큰 개선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 제도,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확대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예컨대 정부는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를 사유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 경우 ‘불법’인 것은 주로 농지에 설치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숙소에 걸맞는 설비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주노동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도 사유에 추가했다.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바꿔 말하면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도 산재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는 뜻이다. 고용허가제가 얼마나 잔인한 제도인지 보여준다.

게다가 산재 은폐가 만연한 현실에 비춰 보면 사용자의 과실이 확인돼야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대책은 한계가 크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3841건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에 의원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과 보험료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업종의 이주노동자 수준으로 맞춘 것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부 예산도 내년이나 확보할 예정이라 올해는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매달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긴 노동시간 때문에 병원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 2018년 이주노동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농축산·어업에 종사할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1.2시간, 휴일은 0.7일로 나타났다. 이런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 살 곳 못되는 이주노동자 숙소 정부는 이런 숙소가 농지에만 위치하지 않으면 여전히 허가에 주겠다고 한다

숨방망이

한편, 숙소를 농지 위에 설치한 사용자에게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기존 대책에서 후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사용자에게 “숙소 개선 이행기간”이라는 명분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사용자가 숙소를 신축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은 1년까지 늘어난다.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열악한 숙소를 유지만 바꿔 다시 설치하면 노동력 공백 없이 계속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벌써부터 이렇게 보잘것없다니, 정부가 6개월~1년 후 여론이 잠잠해지고 나서 숙소를 개선하지 않은 사용자

를 실질적으로 제재할지 의문이다.

사실 고용허가제의 목적 자체가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곳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에서 이주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한다. 그래서 농업 사용자들은 이런 쥐꼬리만한 개선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저렴한 농산물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 증가 즉, 임금 인상 압력을 억제함으로써 전체 자본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번 대책과 같은 땀질식 처방으로는 열악한 숙소를 비롯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금지해 놓은 상태에서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조

금 확대하는 것도 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해도 고용허가제의 업종 제한 때문에 양질의 숙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새 사업장을 골라야 한다. 게다가 3개월 안에 이직을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압력도 받는다.

정부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체류기간, 취업 가능 업종 등의 제한 없이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장경제적 대책으로 청년 실업 개선 못 한다

양효영

3월 3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신규채용 감소와 서비스업 침체로 인해 고용 한파가 거세다. 특히 청년들이 고통을 더 심하게 겪고 있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올해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지만, 그 대책은 결만 번지르르할 뿐 알맹이가 없었다.(관련 기사 : 본지 351호,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청년 환심 사기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20대 청년들 사이에선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

2월 4주차 꺾임 조사에서는 18~29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8퍼센트로 압도적이었다. 이들이 정치적 유동층이 되고 있다. 또한 18~29세에서 무당층이 44퍼센트였다.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문재인은 이들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 민주당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도 이전처럼 부실하기 짝이 없다. 크게 보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부 정책의 규모를 확대한 수준이다.

우선 “더 많은 일자리”를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주되게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180만 원 6개월 지원해 주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특별고용촉진장려금)를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지 않고 시장과 민간기업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계속 드러났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인건비 지원이 끊긴 뒤에도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디지털 일자리”라며 포장하는 업무들은 많은 경우 데이터 라벨링처럼 단순 반복 작업들로, ‘디지털 인형 불리기’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공공 부문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조차 ‘체형형 일자리’로 최저임금 수준에 최장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부들이 취업률을 높이려고 청년 인턴 제도 등 저질 일자리를 양산했던 것과 흡사하다.

이런 대책들을 볼 때, 사실상 다음 대선을 앞두고 취업률 지표 높이기 목적이 커 보인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 직업훈련 강화 비중이 크다. 정부는 기회의 평등에 집중하고 결과는 노동 시장에 맡기겠다는 식이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입사 지원서를 100곳 이상씩 써도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책은 공정도 아니고 그저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런 식의 시장주의적 방식은 결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시장 경쟁에서 각자도생하라는 메시지만 줄 뿐이다.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그 우선순위에 도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시간



계급이란 무엇인가

갖가지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열쇠

린지 저먼 지음, 책갈피, 176쪽, 12,000원

계급 불평등에 대한 날카로운 폭로와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담아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에 쉽게 접근하도록 안내하며, 계급 문제를 둘러싼 흔한 오해와 혼란을 바로잡는다.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이현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 대책을 내놔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불황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여성 취업자 수는 60만 명가량 감소해, 줄어든 전체 취업자 수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여성 일시휴직자 수는 50만 명으로, 2019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방안은 실업과 무급 휴직, 임금 삭감으로 말미암은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정부의 말이 무색하다.

일자리 정책의 대부분은 이미 전에 내놓은 방안의 재탕이거나 지원 대상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수는 5만 7000개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올해 78만 개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홍보한다. 올해 초 문재인이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일자리 104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중 69만 개가 여성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이를 포함해 총 78만 개의 여성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질 일자리

그런데 정부가 만들겠다는 ‘직접 일자리’ 104만 개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번에 추가로 만들겠다는 5만



양질의 공공 일자리 대폭 늘려야 정부는 재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2021년 3·8 세계 여성의 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장(왼쪽)

7000개 일자리도 저질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제시한 일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나지 않는 재활용품 분류·배출 관리 업무나 국립공원 ‘환경 지킴이’(쓰레기 수거), 생활방역 지원 등이다.

물론 실업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임시·단기 일자리로 실업난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가 노동자 서민 여성의 실제 삶이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 지표 개선에만 급급한 모양새인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 규모가 매우 제한적인데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불황기에 기업

주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추가 고용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여성의 복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총 3만 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이나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주는 비용 지원(총 12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 재가 돌봄근로자 생계비 지원(15만 명에게 50만 원 1회 지급) 같은 수당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런 지원은 막대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겠지만, 지원 대상이 매우 적는데다 기간도 한시적이어서 생계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밖의 대책들은 대체로 직업 훈련이나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지원도 최악의 고용 위기를 해결할 대책이라기에는 너무 부족하

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기회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확대하려 해 왔다.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양립”은커녕 기업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쓰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여성들이 다수 종사하는 돌봄 일자리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몇 곳 더 늘려서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주요하게 밝혔다.

실효성 없는

그러나 이 방안이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 불안정 문제를 별반 개선하지는 못할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 요양, 간병 등 사회서비스의 질이 낮고 노동자의 처지도 열악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인 정부의 다른 공약들처럼 거들 후퇴하며 누더기가 됐다. 사회서비스원의 고용 규모가 매우 적은데다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에 내맡기는 방식이다 보니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성평등현황공시제도 도입이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소수집단 우대정책)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을 강제하지 않는 이런 조치들은 이미 일부 도입돼, 노동시장 성차별 완화와 여성 고용 확대에 별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줬다.

실업과 저임금, 소득 감소로 고통 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

저질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국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책임지고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기업주들의 해고와 무급휴직 조치를 금지하고,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금액의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기업 지원과 국방 예산에만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려면 정부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맞선 아래로부터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500명 희망퇴직도 모자라 임금 삭감 하는 르노삼성

이형주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정책부장

최근 르노삼성차 사측은 세계경제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아 적자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전가하고 있다. 사측은 인력과 인건비를 30퍼센트씩 줄여야 한다고 엄포를 놔다.

최근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해 500명 이상이 퇴사했다. 사측은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한 노동자들에게 경영 위기라고 떠들어 대는 동영상 보여 주고, 집으로 편지를 보내 가정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짓을 밥먹듯이 해 왔다. 내 주변 동료는 회사를 떠나며 “이렇게 사느니 나가는 게 맞다”고 할 정도로 르노삼성차에서의 삶이 질려 버린 것이다.

그런데 ‘희망퇴직’으로 사측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다. 사측은 3월 15일부터 5월까지 2교대제를 중단하고 노동

자 수백 명을 무급휴직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교대제 중단 기간을 연장하고 무급휴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입맛대로 무급휴직자를 선별할 가능성이 있어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급휴직에서 제외된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도 올려 더욱 쥐어짜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반발 여론이 커지자, 사측은 2교대제를 유지하려면 현행 주 5일 노동을 주4일로 줄여 비용을 20퍼센트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 연차수당을 절감하거나 각종 보너스를 삭감하는 방식을 내놔다.

또 사측은 전국에서 자동차 수리·정비 등을 담당하는 사업소의 운영을 대거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낫선 타지로 이동해야 할 뿐 아니라 고용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자동차 시장이 잘 나갈 때 투자와 설비 확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윤이 줄었다고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 수년 동안 노동자들은 상당한 희생을 강요 받았다. 사측은 호봉승급을 폐지하고 수차례 임금을 동결시켜 실질 임금을 삭감했다. 그 결과 시급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적자가 아닐 때도 미래 경쟁력을 들먹이며 희생을 요구했고, 신규 물량·차종 유치를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도 줄이고 노동강도는 높여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왔다.

사측의 이번 공격에 반해 르노삼성차노조(다수노조)와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는 오전과 오후 출근 시간

대에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르노삼성차지회는 천막농성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걱정이 있지만 그간 지속돼 온 조건 악화에 불만도 적지 않다. 지금 벌어지는 사측의 공격에 반대하는 투쟁을 더 키워야 할 때다.

양보교섭으로는 계속될 공격 막아 내지 못해

그런데 아쉽게도 르노삼성차노조 집행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겠다고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 측의 안은 현행 교대제를 유지하고 사측의 안보다는 임금 삭감 폭을 줄이는 내용이다.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이다.

노조 집행부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측의 공격을 막아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견이다. 사측의 공격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최근 사측이 말한 인력과 인건비 절감 목표를 채우려면 앞으로도 공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르노삼성에서의 지난 수년간 꾸준히 조건이 악화돼 온 경험을 봐도, 양보 교섭은 조건 악화를 막는 방법이 되지 못했다.

또, 지금 사측은 유럽 수출을 위한 새 자동차 모델(XM3 하이브리드)의 생산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르노삼성차 공장을 방문한 르노그룹 부회장 모조스는 르노삼성차노조 위원장에게 “적기 배송”을 신신당부한 바 있다. 사측은 이 수출 물량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당장 인력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투쟁한다면 사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변희수·김기홍 씨의 연이은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개선 없는 트랜스젠더 차별

성지현

변희수 하사와 김기홍 씨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추모 입장을 냈고 여러 추모 행사와 항의 행동이 잇따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모인 지하철 2호선과 서울광장 추모 행동, 온라인 추모 행사, 성소수자 생존을 위한 이어 말하기 집회, 서울 시장 후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이 있었다.

변희수 하사와 김기홍 씨의 죽음은 이 나라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의 현실을 아프게 보여 준다.

가족, 학교, 직장 등 이 사회 곳곳에 성별 이분법이 뿌리내리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일상에서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온갖 편견에 마주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차별혐오 실태조사’(2021년 2월 공개)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이용, 보험 가입, 은행 이용, 투표 참여, 증명서 발급, 담배 구입 등 일상 업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법적 성별 정보와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591명 중 86퍼센트가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법적 성별 정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성전환 수술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60퍼센트가 꼽은 이유).

의료적 성전환에는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든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트랜스젠더는 구직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57퍼센트가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 과정에서 남자 혹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거나(48퍼센트),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과 외모가 일치하지 않아서(37퍼센트), 출신학교(남자 혹은 여자 학교)를 기재해야 해서(27퍼센트)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고 김기홍 씨도 생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 관리자에게 ‘계속 일하려면 화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한다.

학교나 군대는 특히 억압적 공간이다. 92퍼센트가 교복 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트랜스젠더로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는 군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 것이 두렵다고 답했고(52퍼센트),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거나(28퍼센트), 성희롱을 겪거나(12.4퍼센트), 부적응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12퍼센트)도 적지 않았다.

고 변희수 하사는 그런 군대에서 처음으로 용감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성별을 정정했다. 수술 없이는 성별 불쾌감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는 “훌륭한 선례”가 되고자



3월 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 행동

했지만 결국 “사랑하는 군”에서 잔인하게 내쳐졌다. 육군은 어처구니없게도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심신 장애’로 판정했다.

최근의 연이은 애석한 죽음에 보여 주듯 차별과 혐오는 생명을 위협한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57퍼센트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경험했고, 24퍼센트가

공황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한국 트랜스젠더 건강 연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207명 중 40퍼센트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도 답했다.

우울증 증가, 취업자 대폭 감소, 의료 서비스 지연, 경제 불황을 심화시킨 코로나 위기는 취약한 트랜스젠더의 삶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배반당한 기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끔찍한 차별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개선하리라고 희망을 가졌을 법하다.

하지만 임기가 1여 년 남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차별을 개선한 것은 전무하다. 노골적인 혐오 발언은 삼갔지만 차별을 유지해 왔다. 고 변희수 하사의 다음 말은 평범한 성소수자들의 심정을 잘 보여 준다.

“저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2020년 7월 3일,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변 하사의 강제 전역이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적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해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법원은 지난해 성별 정정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핵심 제약을 남겨 뒀다. 국방부는 지난달 신체검사 규칙에서 ‘성 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일치’로 수정했지만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은 고수했다. 생색내기 외에는 우파 정부 때와 달라

진 게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하나 발의하려고 해도 발의 요건(국회의원 10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논의도 안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군불만 지피다 눈치를 보며 결국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뤘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윤호중은 녹색당 비례대표인 김기홍 씨를 겨냥해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 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이런 냉담한 행태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퀴어퍼레이드 “안 볼 권리”를 운운하는 안철수 등 우파 야당 후보들만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도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진보 표를 의식해 ‘입장이 바뀌었다’고 모호하게 말하지만, 중도 우파 표도 받고 싶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거나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차별을 완화할 요구들

트랜스젠더의 차별을 완화하려면, 우선 본인 의사만으로 법적 성별 정정이 가능해져야 한다. 여러 나라가 외과적 수술을 법적 성별 정정 요건에서 삭제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에서는 의료 요건이 없는 것은 물론, 본인 의사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성, 여성 외에 논바이너리도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등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도 삭제해야 한다.

법적 성별 정정 완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트랜스젠더에게 ‘생존’과도 같은 의료 조처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의료보험 적용). 수많은 트랜스젠더가 이 비용을 감당하느라 허덕이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43개 나라가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의 전부

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도 오랜 요구이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겪는 차별에서 보호받고 구제할 법적 수단을 원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성중립 화장실, 무료 청소년 상담소, 학교에서의 포괄적 성평등 교육도 필요하다.

국가인권위가 변 하사의 진정에 대해 권고한 대로, 국방부는 트랜스젠

더 장병이 복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20개 나라에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등지에서는 성별 불일치를 겪는 장병에게 필요한 의료 조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세금을 방위비분담금 같은 데가 아니라,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커밍아웃이든 아우팅이든 이런 단어가 사라지는 세상이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벽을 박차고 나와서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2020년 3월, ‘연분홍TV’에 보낸 변 하사의 영상편지)

변 하사가 이루지 못한 꿈을 만들어갈 과제가 우리에게 남았다.

이를 실현하려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우파에 반대할 뿐 아니라 차별 해소에 무관심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운동은 장차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인 아일랜드에서는 2015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본인 의사만으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 성별인정법이 통과됐다(성별 정정을 원하는 사람은 3장 정도의 문서만 작성하면 된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로 가톨릭 교회에 대한 환멸이 커졌고, 수년간 대중 투쟁으로 대중의 자신감과 의식이 고양된 덕분이었다. 정부의 수도세 징수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이 벌어진 뒤,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 낙태권 투쟁이 연이어 크게 일어났다.

아일랜드에서는 성소수자 단체 뿐 아니라 노조와 좌파 단체들이 제한된 요구를 놓고 힘을 합쳐 기층에서 차별에 맞선 투쟁을 크게 벌였다.

트랜스젠더 차별을 없애려면 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차별의 근원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도전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임금 노동을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 지배계급은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족에 떠넘기면서, 가족 바깥의 관계들을 차별하고 ‘여성성’ ‘남성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트랜스젠더 차별을 부추기는 주장을 반박하며 기층의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자.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변희수·김기홍 씨의 비극적 죽음 트랜스젠더 차별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일시: 3월 19일(금) 오후 8시

발제: 성지현 <노동자 연대> 기자

정진희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
역은이

참가 문의: 010-4909-2026(문의 가능) 또는
02-2271-2395

※ 연락 주시면, 참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익공유제 — 서민 지원 효과 없고 노사협조주의 퍼뜨린다

강동훈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등과 함께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4월 재보선 전에 3월 국회에서 제정할 공산이 크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익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 제도를 말한다.

이익공유제를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이다. 이낙연은 올해 초에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이바지해 한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하고 말했다. 대통령 문재인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호응했다.

이익공유제는 문재인인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민주당은 2018년 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보수 야당이 반대해 무산됐었다.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자율규제 시행 등과 함께 이익공유제를 내놓으며 중소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불충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만이 커진 자영업자들을 달래려고 다시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익공유제 우선 적용 기업으로 금융권과 함께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



정부는 대기업 강제할 생각 없고 생색만 내려 한다 정부·여당은 이익공유제를 내세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정부 지원 책임을 덜려고 한다

족)·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책임 회피하며 말잔치

재계와 보수 야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익을 함부로 나누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 해외 투자자들이 ISD로 제소할 것이라는 등 하면서 말이다. 이익 공유를 할 필요가 없는 해외 기업으로 하청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협박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제안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다가, 재계의 격한 반

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대기업들은 이윤을 조금치도 뺏기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재계와 보수 야당의 호들갑스러운 반발과 달리 이익공유제가 설사 실행된다고 해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들을 강제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제출해 자율적 참

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일부 기업들이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성과공유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자율 시행이라서 참여 기업이 489곳밖에 안 된다. 이 제도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얘기도 나온 바 없다. 2004년 포스코가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지만, 포스코는 대규모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산재를 방치하며,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쥐어짠 기업이다.

물론 배달의민족처럼 인수합병 문제 등으로 정부에 잘 보여야 하는 기업들은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이익공유제 1호 업체로 참여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영업이익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익공유를 할 게 없다고 나올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까닭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노동자·서민 지원 책임을 털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일부 악덕 기업의 책임을 부각함으로써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말잔치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결국 해롭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익공유제 추진으로 노사협조주의를 퍼뜨림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조건 개선 요구도 억제하려고 한다.

사실 이익공유제는 대자본과 중소자본이 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익공유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격차도 줄어든다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도 궁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대기업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포함된 것이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익공유제를 옹호하면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이익공유제와 함께

‘상생연대 3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법도 이런 의도를 보여 준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실직자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익공유 차원에서 이 기금에 돈을 보탠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조가 먼저 동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안 올린다고 그 돈이 오롯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 대기업들은 사회연대기금에 약간의 돈을 내고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연대’를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얼마 안 되

는 사회연대기금은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잘못된 전제

게다가 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이 갖고 있는 전제, 즉 노동자와 중소기업주가 대기업의 수탈로부터 같은 이해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현실 앞에 무기력하다. 중소 기업주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다. 중소기업주들도 이윤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억제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을 보더라도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논리

는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려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원하청 기업 모두에서 생산성 향상 노력에 협력해야만 (즉 기업이 살아야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상당수도 정부의 이런 포퓰리즘(계급 협력)적 논리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낮아지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빈곤화”한다며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초과이윤공유제, 성과이익공유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에 ‘초과이익공유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 정의당은 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내놓았는데, 이 세금은 이윤이 늘어난 기업뿐 아니라 소득이 크게 오른 고임금 노동자에게도 부

과된다.

이런 식으로 위기의 시기에 노동자도 양보하고 상생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신의 기업주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시키는 나쁜 효과를 낸다.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이익공유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제하고 노사협조주의를 퍼뜨리는 데 이용됐다. 예컨대, 1930년대 대불황 시기에 중간계급에 기반을 둔 프랑스 급진당도 ‘이윤 공유제’를 내걸었는데, 이를 통해 격렬해지는 계급 투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기 불황 시기에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내놓는다고 해서 기업주들도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 노동자 모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이 전망하는

여전한 불황 속에서 부채 위기, 불균형, 불평등이 커지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부터 제한적인 반등을 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기구들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 준다(오른쪽 그림1). 이미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어 온 데다 2017~2019년의 성장률도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향후 성장률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미국 연준(중앙은행)도 미국의 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1.8퍼센트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10년 평균이 2.3퍼센트였던 것에서 더 낮아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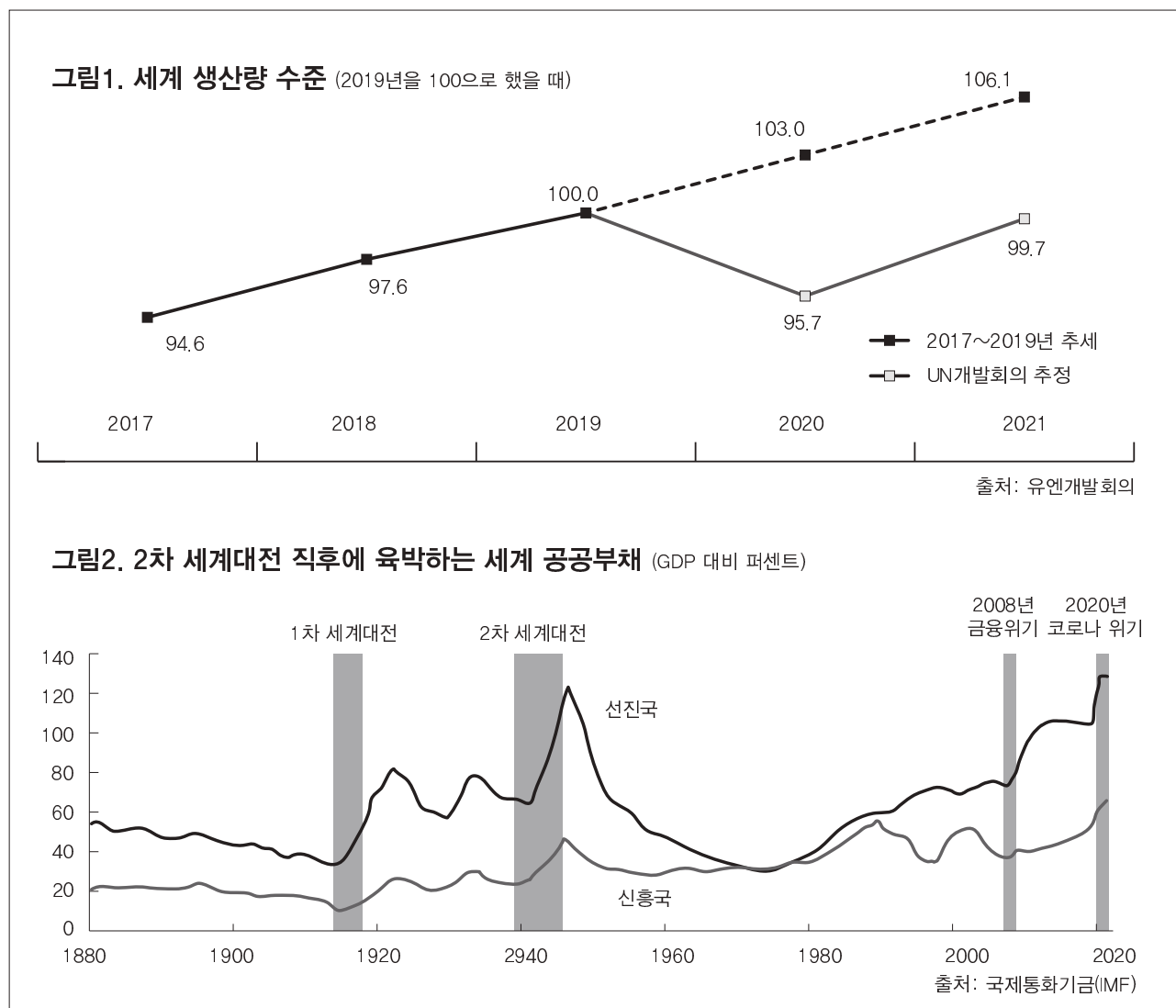
그런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지배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중국도 과거 성장 속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2.3퍼센트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낙관적으로 보면 8~9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그렇다면 2020년과 2021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5퍼센트가량인 셈인데, 이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당하다.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점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미칠 불확실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윤 중심의 백신 생산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주의 때문에 신흥국들은 2~3년 후에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세계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늦어질 것이고, 이는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국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고 재정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거품이 크게 늘어났고, 부채가 급증했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차세계대전 직후 수준으로 높아졌다(그림2). 빚으로 연명하는 부실 기업들도 증가해 기업 부채도 크게 늘었고, 가계 부채도 증가했다.

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례 하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불안정이다. 가령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4퍼센트로, 지난해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도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투기 수요 등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기후 위기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도 오르는 등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제 가격이 떨어져 국제 수익률이 올랐고,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이 때문에 2월 마지막 주에 시중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신흥국들에



서는 돈이 빠져나가며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의 원화도 2월 26일 15원 올라 지난해 2월 이후 하루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는 부채 증가로 인해 금리가 오르며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힌트 보여 주는 사례이다.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오히려 부채 위기로 인한 금융 불안정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될 것 같지는 않다. 물가는 근본적으로 실물경제 회복과 연관돼 있는데, 특히 미국 고용지표는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1월 실질 실업률은 여전히 10퍼센트에 육박하고, 장기 실업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일시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부채 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물가 상승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모순들을 볼 때 우리는 향후 수년간 매우 불안정한 경제 불황기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1930년대 대불황도 한 번의 침체와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년간 심각한 경기 후퇴와 일시적인 회복이 반복되며 결국 제2차세계대전을 거쳐 회복됐다. 낮은 이윤율과 부실기업 문제(충분한 자본 파괴가 이뤄지지 않음)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낮은 이윤율과 부실기업 문제에 더해 1930년대보다 더 심각한 부채 위기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도 경제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회복이 불충분하고, 부채 위험과 미중 갈등 등 제국주의 갈등 심화 속에 일시적이 되어 다시금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업이 위축되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 가전 기업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큰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6조 원으로, 2019년보다 30퍼센트 증가했다. 또, 택배, 콜센터, 비대면 온라인 사업 등 일부 업종들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항공업 등에서는 심각한 고용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97년 말 IMF를 불러들인 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인 올해 1월 고용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1월에 취업자는 98만 2000명 감소해,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조건이 불리한 서비스업에서 고용 감소가 특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가 110만 명 줄었고,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도 80만 명 줄어 심각한 고용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실업은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지만, 청년실업은 특히 심각하다. 청년 확장 실업률은 27.2퍼센트로, 통계 작성 이

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므로 청년들의 고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실업난 속에 여성들이 더 고통받기도 했다. 여성의 고용 감소 폭은 5.2퍼센트로 남성(2.5퍼센트 감소)의 두 배였다.

이렇게 실물 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데도 지난해 풀린 자금이 자산(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과 주가가 치솟았다. 심각한 불황기에 주택난까지 더해지며, 자산 불평등과 함께 평범한 노동자·서민층의 울분은 더욱 커졌다. 이는 정부 지지를 하락의 주요 요인이기도 했다.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금융 불안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고용 위기 대처 문제에서도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며 개혁 염원 대중의 반감을 키워 왔다. 부동산 대책은 2·4대책에서 나타났듯이 친시장적 재개발 확대 방안을 내놓아, 건설 기업주들과 개발 이익을 노리는 토지소유주들과 투기꾼들에게 이로운 일을 벌이고 있다.

고용 위기 대처 방안도 기업주들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게 하려 하거나, 저질 단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 위기와 임금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단 한 차례만 지급했다. 새로 준비되고 있는 것도 소상공인들에게 미흡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노동자 대다수는 배제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난 지원을 두고도 정부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드러나 왔다. 정부는 지난해 다른 나라 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정부 부채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어디에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전 경제 전망 기사(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강동훈·정선영, 〈노동자 연대〉 345호)는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갈등은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는데, 재난 지원을 둘러싸고 기재부 관료들과 다른 정부 인사들 사이의 갈등은 정치 위기가 발전할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심각한 불황에 대처한다면 정부가 낮은 금리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부실 기업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을 운영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 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37.3퍼센트로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절반이 이런 한계기업이다.

이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는 올해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한 데 이어, 쌍용차 법정관리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항공·관광 산업뿐 아니라 조선·기계·석유화학·자동차 등에서도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키울 뿐 아니라) 지배계급 내 쟁투를 격화시킬 수 있고, 이는 정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한진해운 부도를 결정하면서 부산·경남지역 지배자들 다수가 이반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듯이 말이다.

이처럼 기업주와 정부 관료 등 체제의 수혜자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심각한 불황 속에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업간 불균형이 큰 상황(앞에서 언급했음)에서 산업별로 노동자들의 처지와 투쟁의 양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불황 속에 위기에 처한 산업과 기업들에서는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반면 택배, 콜센터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거리가 늘어난 산업의 노동자들은 기업의 지급능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 자신 있게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불균등의 시기에 투쟁이 연결되려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는 지배자들의 이간질에 맞서 운동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2021년 국내외 정세

팬데믹 하의 세계 정치

팬데믹은 지난 한 해를 규정한 쟁점 이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공산 이 크다. 예상을 깨고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됐지만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 않다.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것인데도 제약회사들이 지적재산권을 쥐고 막대한 이윤을 내려 하기 때문이다. 부유한 선진국들이 앞다퉈 백신을 사재 기하는 동안 후진국은 물론 중진국들 은 백신을 구경도 못 하게 생겼다. 그 러는 사이 감염력과 병독성이 더 높은 변종이 확산돼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마저 있다. 자본주의가 낳은 팬데 믹이 역시 자본주의의 논리 때문에 쉽 게 끝나지 않을 듯하다.

상시적 재난의 근원: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말한 인류와 자연의 “신진대사 균열”이 신자유주의 와 결합돼 이제 거대한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코로 나19 팬데믹은 자본이 야생 깊숙한 곳 까지 침투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자본 주의적 농축산업은 더 위험한 바이러 스를 만들어 내는 배양 접시 구실을 하 고, 이런 바이러스가 일단 인간에게 감 염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의 국제적 통합을 따라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을 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정전 사태도 신 진대사 균열과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보여 준다. 이 사태는 이례 적 한파를 낳은 기후 혼돈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능력을 약화시킨 신 자유주의에서 비롯했다. 미국에서 전 력산업 규제 완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 는 텍사스주 전력기업들은 비용 절감 을 위해 추위에 대비하는 장치를 설치 하지 않았고, 예비 전력을 비축할 방안 도 마련하지 않았다.(자본주의가 ‘만일 의 사태’에 취약해진 것은 이번 팬데믹 하의 병상과 방역 물자 부족으로도 극 명하게 드러났다.)

오랫동안 과학자와 활동가들이 경 고해 온 재난들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 다.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팬데믹 외 에도, 반년 이상 이어진 호주 산불, 세

기말적 장면을 연출한 캘리포니아 산 불, 아프리카의 대홍수, 레바논의 폭발 사고 등 거대한 재난들이 잇달아 일어 났다.

재난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저항

이런 재난들은 정치 위기의 직접적 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레바논에서는 폭발 사고가 촉발한 항의 시위로 총리 가 물러났다. 팬데믹 대처 실패는 미국 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일 본에서 총리 아베가 물러나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물론 팬데믹이 정치에 미친 영향은 균등하지 않았고 모순된 효과를 내기 도 했다. 모든 정부가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로 노골적 인지는 저마다 달랐다. 팬데믹의 피해 는 인구 밀도, 인구 구성, 대응의 신속 성, 거리두기 수위에 따라 나라마다 달 랐다. 방역에 나선 정부들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했다. 방역을 위 해 단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 고,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앞장 서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방역은 경쟁적 자 본 축적과 모순됨을 드러냈다. 많은 선 진국들은 록다운을 뒤흔게 도입하고 성급하게 풀었다가 심각한 감염 확산 에 직면했다. 방역 실패는 다시 정부 지지율을 갉아먹는 효과를 냈다.

팬데믹은 기존 불평등을 더 극명하 게 만들고 심화시켰다. 일부 기업은 팬 데믹 특수로 막대한 이윤을 누렸다. 반 면 이 사회의 압도다수인 노동자·서 민층은 수입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2019년 말 시작된 세계적 저항 물결 은 팬데믹 초기에 잠깐 주춤했지만 이 내 다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서 경찰의 흑인 살해를 계기로 미국 역 사상 최대 거리 시위와 항의가 벌어졌 다. 여기에 연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 에서 벌어져 해당 나라의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로 발전하기도 했다. 프랑스 에서는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맞서 지



사진 출처 Robert Brunner(블루리커)

2020년 미국을 뒤흔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양당 체제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계급 투쟁이 더 고양돼야 한다

난 10년 이래 최장 기간 파업이 벌어 지다가 팬데믹이 왔을 즈음에는 수그 러들었지만, 그후 보건 노동자들이 전 투적인 시위와 파업을 벌였고, 연말에 는 경찰력을 강화하는 보안법에 맞서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태국과 벨라루스에서는 민주주의 투 쟁이 벌어지고, 나이지리아에서도 강 도소탕특수부대(SARS) 폐지를 요구 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물론 팬 데믹과 그로 인한 고통이 이들 시위의 중요한 배경일 때가 많았다.

팬데믹은 노동자들의 작업장 행동을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지만, 보건 이나 운송 같은 ‘필수 부문’의 노동자들 은 싸울 자신감이 생기는 효과도 냈다. 한국의 콜센터 노동자들이나 택배 노 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에 나선 것도 이 런 세계적 추세 of 일부다.

중도가 귀환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계속되는 재난과 경제 침체, 심화하 는 제국주의적 갈등 속에서 지배자들은 경제 침체와 재난의 대가를 노동자 들에게 떠넘기려고 노동자들을 더욱 공격할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분노가 더 커지고 사 회와 정치의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이 다. 정치의 양극화는 좌우 갈등으로 나 타날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런 양극화 를 누가 주도하느냐이다.

지난해 미국만큼 그런 양극화를 극 적으로 보여 준 곳도 없을 것이다. 대 규모 거리 시위와 항의가 분출해, “경 찰 폐지”나 “교도소 폐지” 등의 급진적 구호들이 대중을 결집시키는 구호가 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의 비호와 고무 속에서 극우와 파시스 트가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펼쳐진 드라마는 결국 주류 세력인 바이든과 민주당의 집권으로 귀결됐다. 이 점은 양극화가 착실하게 죽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을 계기로 포폴리 즘이 시험대에서 떨어지고 중도가 다 시 귀환해 자본주의가 정상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되기도 했다. 유명한 우파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 야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어쩌면 포 폴리즘이라는 종기를 도려내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중도계 주류 언론들이 이런 주장을 널리 퍼뜨렸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들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 른다는 기대감을 일제히 내비쳤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는 일들이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벌 어지고 있는 듯하다. 인도·브라질의 강경 우파 정부들은 노골적으로 방역 을 거부했다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세에 직면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우파 적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주도 하는 연립정부가 붕괴한 뒤, 유럽은행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초당적 합의 속에서 총리로 취임했다. 영국에서는 당내 좌파이자 당대표였던 코빈이 2019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대 표직에서 물러난 뒤 노동당이 다시 우 경화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자신 이 예전에 특권적 ‘카스트’의 일부로 지 목하고 비난한 중도좌파 사회당이 주 도하는 연립정부의 하위 파트너로 참 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도의 귀환’은 여 전히 취약하다. 예컨대, 트럼프는 비 록 대선에서 패배했어도 상당한 득표 를 했다. 120년 이래 투표율이 가장 높 았던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역

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낙선 후보였 다. 바이든이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불 평등과 일자리, 빈곤에 관해 침묵하는 사이에 트럼프는 일자리·경제 후보를 자처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일부 노 동자들의 표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 한 편, 1월 6일 파시스트들이 포함된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사건은 극우의 성장과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좌든 우든 중도 세력들은 지금껏 대중의 고통과 불만을 자아낸 신자 유주의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불황의 해 결책으로 지배자들 사이에서 채택된 신자유주의는 이제 불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지 오래이지만, 여 전히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중도 정부들의 이런 신자 유주의적 정책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 과 분노가 그동안 진행된 사회·정치 양극화의 배경에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수혜자는 우익과 극 우가 될 때가 많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보여 줬듯이 이들도 어떤 일관 된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중 도파가 수행하던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고스란히 이어가려 했다.

기능장애를 겪는 개혁주의

물론 ‘중도의 귀환’은 현실의 한 측면 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미 국의 경우, ‘중도의 귀환’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선에서 바이든 을 찍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예비경선 시기에 버니 샌더 스는 2016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얻었지만, 그의 대선 도전은 민주당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파란리커

바이든은 취임 한 달 만에 시리아를 폭격하고 이주 아동 구금시설을 만들었다

노력으로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샌더스는 결국 바이든 지지를 선언해 많은 실망감을 자아냈다.

민주당 기득권 세력은 샌더스의 공약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든이 더 ‘현실적인’ 후보임을 설득하는데에 성공했다. 미국의 가장 큰 좌파인 미국 민주사회당(DSA)도 이런 ‘현실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다수가 민주당을 통해서 ‘진보’ 의원들을 공직에 진출시키는 전략을 지지하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전략의 배경에는 미국 양당제의 거대한 압력이 있다.)

2016년에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킨 이후 DSA에는 급진좌파가 대거 합류해서 이른바 ‘클린 브레이크’(깨끗이 손 떼기)론이 세를 더 얻었다. 클린 브레이크론은 샌더스가 또다시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하면 좌파가 민주당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샌더스가 다시 밀려나자 이런 주장은 ‘현실론’의 무게를 이겨 내지 못했다.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민주당에 남아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그러려면 민주당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했다. 예컨대,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전국민 단일건강보험(디케어 포 올) 요구를 내려놓아야 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사회당 주도 연립정부에 하위 파트너로 참여했다. 포데모스는 스페인의 광장 점거 운동이 대중의 거대한 분노를 보여 줬지만 실제로 성취한 것은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세운 정당이었다. 광장 점거 운동의 ‘반(反)정치’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포데모스가 구현한 정치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닌 담론을 둘러싼 투쟁과 선거를 중시하는 민중주의(좌파적 포퓰리즘) 정치였다. 광장 점거 운동이 가라앉자 선거가 그 운동의 유일한 변화 수단이 됐다. 포데모스 지도부는 우파 정당인 국민당을 막아야 한다며 사회당 지지층에 호소하려 했다. 그러면서 운동과 투쟁의 요구들을 삭감하고 공약을 사회당 수준으로 낮췄다. 연정은 그 논리적 귀결이었다. 이 연립정부는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 기업들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다른 유럽 정부들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영국에서 ‘중도의 귀환’은 코빈주의(좌파적 사회민주주의)의 좌절로 나타났다. 코빈의 부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좌파 정치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줬고, 전 세계 좌파들을 크게 고무됐다. 그러나 2019년 총선에서 코빈이 이끈 노동당은 참패했고, 이제 새 당대표 키어 스타머가 작정하고 코빈과 그 지지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코빈이 집권해 신자유주의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 기성 정치세력들, 자본가 계급, 노동당 우파가 똘똘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 시위대 바이든의 ‘정상화’는 극우·파시스트의 성장을 막지 못한다

뭉쳐 코빈을 공격하고, 코빈 자신과 노동당 좌파가 이런 공격이나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를 놓고 동요하고 후퇴한 것이 코빈주의의 좌절에 일조했다. 물론 더 근저에는 영국의 계급 투쟁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코빈 열풍에는 모순이 있었다. 코빈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선거로 이목이 쏠리면서, 코빈이 총리가 되길 기다리는 수동적 분위기가 생겼다. 코빈은 운동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고, 코빈의 부상은 운동의 부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운동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선거를 통한 국가 권력의 획득을 우선시하는 좌파적 개혁주의의 프로젝트들이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중도의 귀환’은 이처럼 좌파적 대안이 부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전통적 기득권 세력이 불안정하게 되돌아온 광경은 이미 재작년 그리스에서도 볼 수 있었다. 대중의 변화 염원을 배신한 시리자가 결국 전통적 기득권 정당인 신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 노동계급의 결정적 패배를 뜻하지는 않았다. 신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리스의 반파시즘 운동은 정부를 압박해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을 불법화하는 승리를 일궈 냈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가 부상하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계급 투쟁과 좌파들이 그리스에서 강력하다는 유리한 조건 덕분만은 아니었다. 혁명적 좌파인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시리자 같은 개혁주의 세력들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함께 행동을 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좌파 개혁주의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팬데믹이 내는 모순된 효과 속에서 대중의 급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그 수준은 불균등하고 각 나라의 저항들도 나름의 약점과 한계들이 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에게는 현 시기의 시험대를 통과하고 부상할 수 있는 좌파를 건설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에 관한 논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만성적인 위기에 시달려 온 프랑스의 반자본주의신당(NPA)는 3월 보르도시(市) 지방선거에서 뿔랑송이 이끄는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운동 ‘불복종 프랑스’와 선거 동맹을 맺어 1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고 시의원 3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다른 한편, NPA 내의 일부 세력들은 노란 조끼 운동, 2018년 철도 파업, 2019년 연금 개악 반대 파업 등 고양 중인 프랑스의 계급 투쟁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NPA 내에서는 NPA를 더 공공연하게 혁명적인 당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들과, 선거를 겨냥해 뿔랑송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올리비에 브장소 등 NPA 지도부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노동당 새 대표 키어 스타머가 코빈과 당내 좌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많은 당원들이 여기에 항의해 당을 빠져나갔다(2020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약 5만 7000명이 빠져나갔다. 당원 수가 10퍼센트 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영국의 정설파 트로츠키주의 조직인 영국 사회당(SP)은 노동당 왼쪽의 선거적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코빈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노동당을 나올 때라고 호소하며, 왼쪽의 대안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어떠한 것이든 의회 밖 투쟁을 건설하는 데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 포데모스, 코빈 등(좌파적 사회민주주의)이 좌절된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좌

파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런 좌절들을 지도자의 일탈이나 좌파적 압력의 부족으로 설명하며 면밀하게 진단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정권 장악이라는 “현실” 정치를 우선시하는 노선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아무리 함께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점에 이르면 그런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과 충돌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노선 자체가 요구 수준을 낮추고 지지자들을 자제시키는 압력을 체계적으로 낳는다.

이런 논의들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황도 세계적 위기와 양극화라는 전체 그림의 일부로서 봐야 한다. 현재 한국은 대중 자신의 행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개혁주의적인 좌경화는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돼 왔다. 노동자들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패배하면 우파가 득세할 것을 우려하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고무하는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모든 선거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선거적 노력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는 것에 종속돼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이루지 못한 것을 소위 말하는 ‘정치’로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하면서 그 운동이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 목표들을 달성하게 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대중 투쟁이 비교적 활발하게 벌어진 나라들에서도 혁명적 좌파는 어느 정도 비슷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미국노동총의 집계에 의하면 2018년, 2019년에 극적으로 늘어나던 파업 건수는 2020년에 5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이 통계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한 파업만 집계한다는 허점이 있다. 팬데믹 초기에는 여러 비공인 파업이 벌어진 바 있으며, 안전 소

홀에 항의하는 작은 파업들도 적잖이 있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영향력을 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만 보고 미국이 계급 투쟁의 퇴조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열기가 노동자들의 작업장 행동으로 곧바로 전이된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게다가 미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훌륭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체로 민주당에 포섭된 상황이다. 양당 체제의 압력을 극복할 좌파적 대안이 부상하려면 근본적으로 더 강력한 계급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얼마 전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회에서 ‘마르크스21’의 아니스 텔라톨라스가 그런 대안은 “단지 몇몇 좌파들이 선언만 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극우와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고 계급 투쟁을 더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투쟁이 비교적 활발했던 프랑스에서도 노동자 투쟁은 불균등했다. 2019년 말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서 벌어진 대규모 투쟁의 주축은 파리교통공단(RATP) 노동자들이었다. 이 투쟁은 파리교통공단 바깥으로도 무기한 파업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더 전진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개혁주의가 분명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 이 지도자들의 개혁주의를 뛰어넘어 파업에 나설 정도로 자신감이 높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RATP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업장 내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기층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져 왔었다. 무기한 전면파업의 주도력도 바로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문제는 이런 동력이 다른 부문으로는 충분히 “수출”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연금 개악에 찬성해 서라기보다는 그 부문의 주관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민간부문 노동조합들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었다.(저질 일자리 노동자들이 노란 조끼 운동에서 두각을 보인 집단이었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처럼 노란 조끼 운동도 저절로 일터에서의 저항의 물결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국제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낮은 노동자 활동 수준이나 온건한 세계관 속에 둘러싸여 혁명적 확신을 잃고 사기저하돼서는 안 된다.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데올로기 투쟁(선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팬데믹이 가하는 제약이 만만치 않음에도 기회를 보아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강화시키는 정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혁명가들의 단단한 중핵을 건설해야 한다.

증대하는 지정학적 불안정

장기 불황과 팬데믹은 지정학적 질서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위기들이 체제에 내재된 긴장과 적대를 더 날카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국주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증대해 왔다.

2008년 위기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지난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나 팬데믹 종식까지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은 느리고 불안하다.

현재 이런 불황들은 각국 정부들 간의 협력적인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자본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점도 국가들 간의 긴장을 더 첨예하게 만든다.

세계정치의 지정학적 문제 중에 단연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 애국주의를 표방하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는데, 지난해에는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갈등을 더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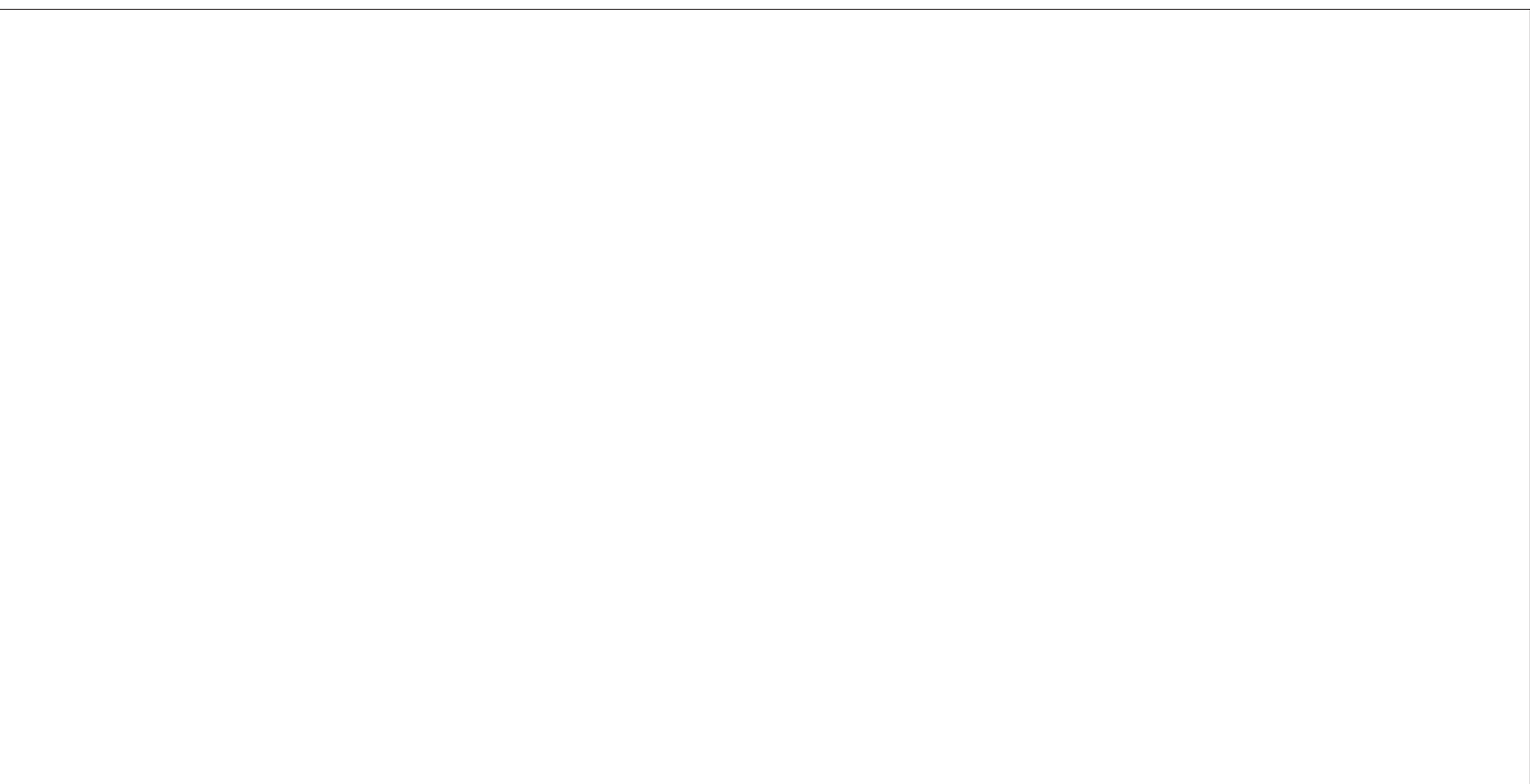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새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그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 노선이 기본적으로 옳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кен은 인사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 영역에서 걸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바이든 자신도 2월 4일 국무부 연설에서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히며 중국을 가리켜 “우리의 번영, 안보, 민주적 가치 면에서 가장 커다란 경쟁자”라고 했다.

최근 바이든은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우리의 이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말이다.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연계로 공급망을 재조정해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아시아에서의 미군 전략과 태세, 대중국 국방 정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인 미군 배치와 운용이 이번 핵심 검토 사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커트 캠벨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았는데, 그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대화인 쿼드를 확대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중국은 만만찮은 상대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해외 직접 투



오산 미 공군기지로 착륙하는 미군 정찰기. 이게 바이든이 말하는 미국의 '귀환'이다

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가 됐다. 팬데믹 와중에도 중국은 플러스 성장으로 미국과의 경제 격차를 줄였다. 시진핑 정부는 무역전쟁에 대응해 내수 진작과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강화하려고 중국 인근 지역에서 단호하게 행동해 왔다. 예컨대, 지난해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 불거져 양측 군대의 유혈 충돌이 일어난 것도 이 점과 관련 있다.

중국-인도 국경 분쟁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곳곳에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 해경은 모두 센카쿠(다오위다오) 일대에서 총기 사용 등의 무력 사용을 더 쉽게 하도록 자체 규정을 바꿨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위험이 잠재적으로 큰 곳의 하나다. 바이든은 자신의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고위급 외교관을 취임식에 앉힌 것이다. 대만은 중국을 배제한 반

도체 공급망 조정 문제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대우받고 있다. 바이든 취임식 나흘 후 마침 미군 항공모함이 대만 남부 해역을 지나자, 중국 폭격기들이 그리로 출격해 미군 함모를 미사일로 타격하는 모의훈련을 벌이고 돌아갔다. 이 훈련은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놓고 바이든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불안정이 계속 증대될 것이고, 한반도도 그 영향 아래에 있을 것이다.

미·중 갈등이라는 균열과 함께, 다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다른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연합 간 통상 분쟁 등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 갈등이 악화돼 왔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대유럽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독일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공사에 제재 위협을 가했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지역 강국들이 갈등을 키우고 충돌을 벌인 일들이 있다. 지난해 지중해 북동부에서 천연가스 쟁탈전이 벌어져 그리스

와 터키가 상대방을 향해 전쟁 위협을 했다. 이 갈등에는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까지 얹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벌였다. 여기에는 터키와 러시아가 관여해 각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지원했다. 이런 일들은 경제 침체와 팬데믹 속에 군사적 충돌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동은 여전히 각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며 갈등을 빚는 화약고다. 중동에서의 다툼은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한 데 이어 2011년 아랍 혁명이 패배하면서 중동의 혼란은 매우 깊어졌다. 그런 가운데 터키,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등 지역 강국들이 나름의 야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복잡하게 얽혀 왔다. 이런 상황 속에 시리아, 예멘 등지에서 끔찍한 내전과 대리전이 지속됐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자국의 역량을 중동에 덜 쏟으려는 시

도, 즉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가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한 그 방향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래서 이란과의 핵협정에 복귀할 의사를 밝혔고, 이란과 사우디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예멘 내전을 중재하려고 예멘 특사도 임명했다.

바이든은 중동 질서가 안정되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 ‘안정’은 진정한 평화와는 무관하다. 중동의 패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든의 중동 정책에는 모순이 내포돼 있다. 이란과 사우디 등 걸프 연안의 수니파 국가들을 중재하는 한편으로, 역내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협박할 태세도 갖췄다.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 홍해 쪽에 새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한 일은 이런 측면을 잘 보여 준다. 바이든 정부도 중동의 혼란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며, 외려 그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도 악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 경계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2017년의 트럼프 정부만큼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몰아세우지는 않더라도, 자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철하려고 북한 위협을 과장하고 대북 무력 시위와 제재를 강화할 공산은 꽤 크다.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도 문제다. 요즘에 미군의 오산공군기지 등에서 미군 정찰기가 출동해 남중국해 등지로 날아가는 게 일상이 됐다. 그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증대해 온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더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압박, 한·미·일 동맹 강화 등이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에서 뜻밖의 긴장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항공모함(랴오닝함) 바이든은 미·중 갈등을 완화시킬 생각이 없음을 공언했다

한국 정치

올해에도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 운동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진보·좌파 정치세력들도 한국 정치의 주변부에 머무를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식정치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공식정치 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국 자본주의를 둘러싼 현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길어지는 경제 침체와 팬데믹 위기 대응이 단연 핵심 쟁점이다. 둘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와 팬데믹의 복합 위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지출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는 부담과 경제 전반의 부채 증가 문제도 지배자들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확대를 말하는 것도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도 그 목적은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의 투자가 늘고 투자 대비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정부와 기업주가 추구하는 경제 회복 목표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취업자도 늘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자본 축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고, 자본 축적이 중단 위기를 겪지 않고 원활히 확대재생산 순환을 반복하려면 사회 안정과 국가의 확고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장기 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각국의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와 유치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열을 올리는 이유다. 그중 핵심은 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와 임금 절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지도자들에게 개혁을 약속하면서도 각종 기업(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는 일관된 이유다. 직무규제 확산 시도도 그 일환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약속과 달리 더딘 것은 약속 자체가 기만적이기도 했지만, 임금과 고용 등 정규직 노동조건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합부로 정규직화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국제질서 불안정도 지배계급의 걱정거리다. 미·중 갈등은 미국이 주도해 중국까지 포함시켰던 자유무역 제국주의의 세계화 질서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이 균열에

더 큰 금이 가는 배경이 됐다. 이 자체만으로도 대외의존도가 큰 수출형 경제에는 리스크 요인이 된다.

그러나 위기는 더 복합적이다. 현재의 불안정은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큰 이득을 취하며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에게는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인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더 높다고 해도 간단히 줄타기나 친중 노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20년간 진척돼 온 중국과의 경제 통합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한국 경제는 미일 중심의 시장에 통합되면서 성장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중국과의 경제 통합은 증대돼 왔다. 특히, 2008년 공황 이후 중국 시장의 도움을 받았다. 중국은 한국의 투자처이자(자 판매처이고 중국도 한국에 대해 마찬가지다. 우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같은 말이 유행했다.

그런데 이후 갈등은 점차 고조됐고, 지금은 미·중 갈등이 상수가 됐다. 바이든 정부의 갈등 양상은 트럼프 때의 무역 전쟁보다 더 할 것이다. 지금 반도체의 공급망 재편까지 들고 나온다. 이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런 국제질서 불안정 속에서 한국 스스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 요인들은 한국 자본주의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높여서 한국 정치에 양극화 압력을 창출하는 요인들이다. 기업주들은 문재인이 포퓰리즘 전략으로 노동자 투쟁을 억제해 온 것 때문에 정부에 여전히 일정 정도의 지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노동개악과 규제완화의 속도가 더뎌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노동개악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비용이 너무 크다면 기업주들은 태도를 달리할 수도 있다. 양극화 압착 속에서 중도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전략은 갈수록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의 포퓰리즘 전략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조국 국면에서 초래된 위기에서 급추락하지 않았던 것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가 있었다. 특히, 우



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거둬 제외됐다

파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사실상 반대한 덕분에 여권이 총선에서 득을 봤다.

결정적인 도움은 진보계 지도자들의 비판적 지지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길게 보면, 민주당 정부가 개혁을 배신해 대중이 등을 돌릴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우파의 재기를 돕는 꼴이 된다.

문재인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온건좌파) 지도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 그들을 배척하고 공격하기보다는 포섭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노동자 대중을 (경제 침체의 대가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통합의 이름으로 말이다. 이런 전략이 통한 것은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정의당 지도부, 진보당 지도부, NGO 지도자들 등이 모두 문재인과 (비판적으로) 협력해 개혁을 성취하겠다는 노선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개혁을 제공해 줄 거라는 바람은 헛된 것이었다.

둘째, 포퓰리즘 전략을 통해 문재인은 왼쪽을 이용해 오른쪽에서 오는 위협도 견제하려고 했다. 부패한 한중의 세력, 전통적 집권세력이자 강성 우파에 맞서는 국민적 연합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호응을 정권의 강화에 이용해 왔다. 조국 임면 국면에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나 갑을 담론 활용이 대표적이다.

최근 사례는 중대재해법 사례가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운동과 진보계(온건좌파) 지도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 염원(요구)에 진지하게 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윤석열 제거 실패

로 커진 위기(우파의 공세를 포함해)에서 탈출하는 데 그 지도자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중대재해법을 규제 강화로 받아들였다. 결국 문재인이 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막판에 법안 이름과 내용에서 대폭 후퇴해 실속이 없는 법이 돼 버렸다. 중대재해법 제정 국면에서 문재인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양쪽의 압력에 직면해 실체가 새삼 폭로되고 있었는데 말이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문재인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구출해 줌으로써 결국은 기업주와 우파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이런 맥락에 비춰 볼 때, 중대재해법 통과 후 진보진영 일부가 법이 제정된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변호하는 평가를 한 것이 잘못된 이유다.

셋째, 결국 위기의 시대에 포퓰리즘을 이용해 저항을 억제해, 이윤 회복에 필요한 정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집권 배경을 보면 더 잘 이해된다. 2008년 세계 대공황 직후 선진국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규제금융들을 투입했다. 그리고는 그 부담을 해소하려고 급한 불은 끈 2010년대에는 강경한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중의 불만이 자라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중도 노선이 지배하던 공식정치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이 배경 속에서 2013년부터 유럽에서 좌파적 개혁주의와 우익 포퓰리즘이 급속히 성장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박근혜가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부패 때문에 탄핵되자 민주당 문재인이 선택됐다. 지배계급은 민주당과 문재인을 통해서 이윤 회복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선 지도부를 포

섭해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근혜의 실패 때문에 지배계급이 질서 안정(현상 유지)을 위해 문재인이 포퓰리즘 전략을 용인한 것이다. 어떤 좌파 단체는 문재인이 포퓰리즘이 법치주의의 안정, 즉 지배 질서의 현상 유지를 위협한다고 보는데, 이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바람에) 상황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반우파 민주연합을 향한 전략은 우파의 재기를 돕는다

문재인은 4년 동안 개혁을 줬다 뺐거나, 준다고 해 애만 타게 해놓고 안주거나, 엉뚱한 걸 주는 식으로 해 왔다. 간판은 노동존중을 걸어 놓고, 노사 양쪽 모두에게 개별 법제화를 약속하고는 최종 결과는 기업주들에게 유리하게 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중대재해법, ILO 협약 비준이 이 모두 그런 식이었다. 즉, 최저임금을 첫째 올리고 산업범위 개악하기, 노동시간 52시간 제한 강화하고는 탄력근로제 도입하기, 박근혜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대신 성과직무급제 추진하기, 핵발전소 하나 폐기하고 나머지는 계속 건설하기, ILO 협약 비준한다면 노조법 개악도 함께 끼워넣기, 부동산 세금 조금 늘리고 공급 확대를 발표하기 등등.

지키기 힘든 건 아예 처음부터 ‘뺑치기’로 일관했다. 탄소 줄이기, 페미니스트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위기 때 진보계를 우군으로 동원하려고 ‘토착왜구’ 식의 프레임으로 일본에 맞서는 국민적 연합을 호소하고, 검찰을 앞세운 부패한 구 집권세력에 맞선 민주연합 슬로건도 활용했다. 코로



사진 출처: 연합뉴스



택배노동자들, 코로나 팩데믹하에서도 기회를 활용해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나 위기 극복 국민적 통합을 위한 코드 네임은 K방역이었다.

이런 사기극이 통한 것은 진보진영 지도자들이 우파의 귀환을 두려워해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비판하면서도 결정적으로는) 눈감아준 덕분이었다. 지금 진보계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며 과거를 돌아보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할 때 “촛불(혁명) 정부”를 참칭한 것을 그들 대부분이 보아넘겼는데, 이것이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파보다는 덜 나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약간의 개혁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실제로 정의당은 촛불 개혁 연합을 주장했다. 박근혜 탄핵 공조의 연장선으로 정의당, 민주당, 새누리당 탄핵파 등의 개혁 입법 공조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당시 20대 국회에서 다수파 개혁 연합을 꾸려야 적폐 청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 노선은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파산했다. 새누리당 탈당파는 국민의힘으로 되돌아갔고,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은 대중의 심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촛불 개혁 연합”의 실패가 정의당이 직면한 리더십 위기의 본질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파는 사기가 회복돼 재기를 꿈꾸고 있다. 우파의 사기 회복은 선거 여론조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정권을 잡고 유지해 온 노련한 정당이다. 지금은 전통적 지지층이 분열해 있고 지리멸렬해서 우파 통합 리더십을 세우지 못해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래서 기만적인 “중도로의 확장성” 논쟁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파에 적절한 후보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의 전망

이 밝은 것도 아니다.

특히, 정치 양극화 추세와 진보계 지도자들의 헛발질 덕분에 우파의 사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임을 봐야 한다. 게다가 지금도 막상 우파가 정부를 줄기차게 때리면 그것이 반영된다. 부동산 공급 문제나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다. 특히, 우파 비판이 대중에게 먹혀들 분위기이면 진보진영이 문재인 비판에 침묵을 해 버리니 우파는 더 신이 난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의 사기 회복이 대중의 사기 저하나 우경화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체 행동이 줄면서, 주저하는 지도부를 압박해 대중 투쟁 건설로 밀고 나갈 만능은 아니고, 진보계 대안 없이 문재인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긴 해도, 계급의식이 후퇴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직 노동계급의 주력 부대는 본격적인 공세를 아직 당하지 않고 있다. 가령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협력 노선을 추진하다가 대의원대회에서 두 번이나 실패해 결국 불명예 사퇴했다.(그런데 좌파는 사회적 대화 문제에서나 중대재해법 같은 입법 캠페인에서도 노조관료에게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좌파가 문재인과의 깨끗한 결별을 촉구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혼탁스러운 올해 공식 정치

올해는 (판이 커진) 재보선부터 정권에 불리한 요인이다. 문재인 레임덕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문제는 여전히 폭탄이고, 가덕도 공항을 둘러싼 국토부의 반발 등 레임덕 조짐은 분명하다. 대선 국면으로 이동하면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문재인인

여권 내 통제력도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 대선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우파가 선거에서도 충분히 반사이익을 얻을지 아직 불투명하다. 왼쪽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미워도 다시 한 번” 투표도 다시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4년보다는 양극화 추세가 강해지는 속에서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객관적 위기가 심각해 노동자도 기업주도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재인인의 정치적 위기의 실체다.

각 정치세력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세력들도 분발해야 한다. 이때 혁명적 좌파의 분석과 주장이 매우 중요하다. 현안과 정부 비판, 자본주의 문제를 잘 결합시킬 줄 알아야 한다. 우파 비판과 민주당 비판을 결합시켜야 한다. 개혁주의의 전략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대안을 내놓는 주장과 논쟁이 강화되어야 한다. 객관적 위기만으로 개혁주의에 조종이 올리고 있거나 단순한 폭로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선거에서 수백만 표를 얻고 2016년 이후 선거 영역에서는 진보(계)를 대표하는 정당의 위상을 갖게 됐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은 존재감이 매우 약화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했다.

최근 1~2년간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서 지지층에게도 매력적인 진보적 대안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났는데, 정의당이 이를 감싸고 편드는 바람에 우파는 손

쉽게 진보·좌파를 싸잡아 위선과 내로남불의 집단으로 비난할 수 있었다.

국회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는 선거법 개정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내려고 정의당은 방어해서는 안 될 것까지 방어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그렇게까지 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비례 득표를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선거 성적은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 했다.

결국 책임을 지고 심상정 대표가 사퇴하고 김중철 새 지도부가 등장했으나 석 달 만에 대표가 성 관련 추문으로 사퇴하고 결국 3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탄핵 공조를 촛불 연합의 이름으로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정치 체제 차원에서도 반민주적 반동의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에 탄핵을 주장하며 당이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국회에서 정의당, 민주당, 당시 새누리당 탈당파 등 3자가 연합해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촛불 염원을 반영했으니 새 정부 하에서도 그 연합을 이어 가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렇게 “촛불 개혁을 위한 연합 정치”가 돼야 개혁(적폐 청산)을 위한 의회 다수파 형성이 가능해지고, 그에 바탕해야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런 노선은 정의당이 주류 사회민주주의(더 구체적으로는 좌파적 포퓰리즘 경향의 개혁주의 정당이라는) 성

격에서 비롯했다. 개혁을 위한 반우파 국민연합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강령과 실천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 안보를 지지하며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한다. 정의당은 노조 상근간부층 일부도 기반의 일부로 삼고 있지만, 창당 때부터 계급 정치를 깔고러워해, 매우 온건하고 계급 타협적인 사회연대전략 노선을 고수해 왔다. 정의당의 포퓰리즘 정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단결에 협력하고자 했을 때도 드러났다.

정의당은 의회에서 여당과 사실상 공조를 해 왔다.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그와 협력도 해서 개혁을 성취하자는 노선이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인의 개혁 배신이 환멸과 이반을 낳으면서 우파의 사기가 한껏 오르고 있고, 새누리당 탈당파는 진작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으로 차례차례 복당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파적 반대파로 복무하고 있다.

결국 정의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구해 온 전략적 실천은 사실상 파산한 것이다. 이것이 정의당이 겪는 리더십 위기의 본질이다. 정의당의 위기는 지지층이 탈정치화되거나 우경화해서가 아니라 전략과 노선 자체가 실패하면서 온 위기다.

정의당의 위기는 장기화된 경제 침체, 팬데믹 위기, 제국주의적 갈등의 고조에 따른 국제 질서의 불안정 격화라는 배경 속에 있다. 물론 객관적 위기 때문에 개혁주의 정치 운동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전략과 노선은 객관적 위기에 걸맞은 급진적 대안을 내놓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지 않고 점점 소심해진 데 문제가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 탄생 150주년 기념

개혁을 위한 투쟁은
혁명적 근육을 기르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혁주의 사상에 맞서 투쟁하며 혁명을 옹호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정밀 타격해 마르크스주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가 마르크스주의에 기여한 바를 김인식이 살펴본다.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3월 5일 폴란드의 소도시 자모시치에서 태어났고, 1918년 독일 혁명에서 사회주의 투쟁을 이끌었다. 1919년 1월 15일 혁명을 반대한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지도부의 사주를 받은 자유군단(우익 의용군)에 체포돼 살해됐다.

스탈린주의 전통에서는 룩셈부르크가 자발성을 강조하며 조직을 평가절하했다고 부당하게 깎아내린다. 이 때문에 알곳게도 혁명적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개혁주의자들이 반스탈린주의적(더 정확하게는 반레닌주의적) 맥락에서 룩셈부르크를 개혁주의적으로 채색하며 찬양하기도 한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마르크스·엥겔스·레닌·트로츠키·그람시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와 국제주의 전통에 있는 위대한 혁명가다.

중서부 유럽의 정치 환경

개혁주의 사상에 맞선 투쟁은 룩셈부르크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 물론 러시아 혁명가들인 레닌과 트로츠키도 개혁주의에 맞서 혁명적 투쟁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개혁주의의 뿌리가 허약했다. 시베리아나 교수대 같은 국가 탄압이 모든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를 짓누르는 나라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적 길을 꿈꾸기는 어려웠다. 노동조합이 거의 없디시피 한 곳에서 노동조합을 노동운동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할 사람도 드물었다.

그러나 중서부 유럽은 상황이 달랐다. 보수적 개혁주의가 훨씬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사상과 분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독일 사민당의 당원은 50만 명이었고, 노동조합원은 125만 명에 이르렀다. 이런 환경에서 활동한 룩셈부르크는 레닌이나 트로츠키보다 일찍 노동 관료에 대해 더 명확한 견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룩셈부르크는 1898~1899년에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를 썼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됐다. 책 제목에서부터 혁명적 정치와



1907년 독일 사민당 집회에서 연설하는 룩셈부르크

대비되는 특정 정치 운동으로서 개혁주의의 존재를 지목한다.

물론 책 제목만 보고 룩셈부르크가 개혁을 반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독자들이 있을까 봐 룩셈부르크는 서문에서 개혁과 혁명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연관이 존재함

을 분명히 밝힌 뒤 주장을 개진한다. “사회 개혁을 위한 투쟁은 수단이며, 사회 혁명은 목적이다.” ‘노동자연대’ 기본입장은 ‘개혁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이 책에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정면 비판

했다. 룩셈부르크는 이제 막 독일에 정착한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 혁명가였고, 그가 비판한 상대인 베른슈타인은 사민당의 중견 이론가였다. 당시 독일이 여성에게 선거권조차 허용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룩셈부르크가 얼마나 당찬 혁명가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베른슈타인주의의
요지와 배경

베른슈타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는 길들여지고 합리적인 제도가 됐다. 20년 넘게 번영하면서 마르크스의 10년 주기 위기론도 틀렸다. 1870년 이후 발칸을 제외하곤 유럽 땅에서 전쟁이 없었다. 노동운동은 이제 불법이 아니다. 사민당은 선거에서 점점 승리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강화되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 없이 개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자본가들과 협력해 사회주의로 점진적 이행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를 배격하고 “독일 민족의 영예로운 임무” 따위를 강변했다.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노동자 국가) 개념이 “구닥다리”라고 비판했다. 이 개념이 스탈린주의에 의해 압제 정치로 오염돼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받기 훨씬 전에 그랬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마르크스가 자신이 기여한 결정적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고,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사회적 전략이 됐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 독

일 사민당의 지배적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었다.

독일 사민당에는 모순이 있었다. 국가 탄압 때문에 급진적 야당의 성격을 유지해야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 행동에서 급진적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원칙에서는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적이었다.

1890년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 단체인압법이 폐지되자 사민당은 정치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실천에서는 더 많은 의원을 배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민당 내에서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사민당 사무총장 이그나츠 아우어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행할 뿐이다” 하고 말했다. 사회주의적 강령보다 실천이 훨씬 더 사민당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정당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제 노동조합 운동의 기회주의 조류들과 선거 득표에 대한 집착이 사민당 기구들에 만연했다. 베른슈타인은 이런 관료적 보수주의를 대변했다.

룩셈부르크의 베른슈타인 비판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정책들이 노동계급에 이로운 개혁들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그 개혁들을 얻을 수 있는 노동계급의 힘을 무장 해제시킨다고 비판했다. 룩셈부르크가 베른슈타인을 비판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뉘 볼 수 있다 — 방법, 경제학, 국가 문제, 노동자 운동.

방법

룩셈부르크는 먼저 베른슈타인의 방법을 비판했다. 베른슈타인이 변증법을 거부하고 절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소비자 협동조합 가게에서 폐피나 후추의 무게를 재듯이, 베른슈타인이 사회 개혁과 혁명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계속 비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가 강조했듯이, 변증법을 부정하는 것은 투쟁과 모순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변화의 힘을 이해하거나 그 변화를 지도할 수 없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변증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개혁주의에 이론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이론을 ‘교조’라고 부르며 경멸한다. 혁명가들은 몽상적이고 자신들이 현실주의라고 말

한다. ‘언제 올 지 기약도 없는 자본주의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고 미래를 실험하자.’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개혁주의 정부들이 자본주의의 기본 토대를 전혀 손상시키지 못하고 거듭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경제학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경제가 적응력을 키워 위기 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저에 있는 모순을 밝힘으로써 위기가 재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른슈타인이 틀렸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10년 주기 위기론’에 대해서도, 룩셈부르크는 ‘10년 주기’는 “순전히 외적이고 우연한 현상”일 뿐이고 위기는 자본주의의 경제 주기에서 필수적 일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00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반증했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자본주의 규정도 비판했다. 베른슈타인이 “자본주의 개념을 생산관계에서 소유관계로 뒤바꾸고” 자본가를 “생산 범주”가 아니라 “소유권 범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법률적 형태가 아니라 생산관계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열쇠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날 일부 좌파가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잘못 이해하고는, 중국과 북한 등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착각하는 것에 대한 선구적인 통찰이다.

자본주의 국가 문제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가 확대되면 의회에서 노동자 의원이 다수가 돼 사회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더욱더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봤다.

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국가가 민주적 형태를 취할지 아닐지는 특정 시기 지배계급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가 미국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한 조건에서 번성한 것은 맞지만,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지배계급의 지배를 강화한다. 형식이 바뀌지 몰라도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본주의는 그 형식(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1930년대 나치 독일이나 1973년 칠레 쿠데타 등에서 그런 사례를 봤다.

그렇다고 해서 룩셈부르크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가치 없다는 식으



1919년 6월 13일 룩셈부르크 장례 행렬 1월 15일 살해당한 뒤 거의 다섯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장례가 치러졌다. 사진 배너에는 룩셈부르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기사(‘질서가 베를린을 지배한 다’)에 있는 문장인 ‘나는 있었노라, 나는 있노라, 나는 있으리라’가 써여 있다



1919년 베를린의 대중 시위 플래카드에는 ‘모든 권력을 노동자·병사평의회로’라고 써여 있다

로 조작파적 결론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을 던져 주지만,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는 필수적이라고 룩셈부르크는 주장했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데 사용하게 될 정치 형태들(자치, 선거권 등)을 민주주의가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국가의 구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개입해 통제를 늘려 간다는 것이다.

복지의 도입·확대가 그런 사례다. 룩셈부르크는 노동계급의 이해와 사회 발전이 일반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이해와 대체로 충돌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 발전에 필요한 기능들을 떠맡는다고 지적했다.

당시만 해도 복지 국가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룩셈부르크는 복지 국가의 등장을 사회주의의 도래로 보는 개혁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조작파주의적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룩셈부르크는 개혁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을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룩셈부르크는 국민 자본주의의 수호자로서의 국가와 경제 체제의 국제적 성격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지적했다. 사실, 이 점은 국민경제의 틀 내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개혁주의 정부가 부딪히는 근본적 한계다. 제1차세계대전 와중에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인 부하린(《세계경제와 제국주의》)과 레닌(《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이 이런 모순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 무렵 자본의 집중은 카르텔과 트러스트 형태를 취했는데, 룩셈부르크는 이것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커다란 혼란의 도구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용의 발전도 베른슈타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기를 악화시키기보다 그 위험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룩셈부르크 시대 이래 계속되는 대형 무역 갈등과 경제적 충돌은 이런 진단을 확증해 준다.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에서 군국주의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군국주

의가 국가 간 경쟁에서 국민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 수단이고, 자본과 국가 방위를 위한 자국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병폐”다.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15년 뒤 제1차세계 대전이 발발했다.

룩셈부르크는 군비 지출이 특정 시기에 경제를 자극하면서도 궁극으로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도 잘 묘사하고 있다.

노동자 운동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자체가 변화의 수단(의회 등)을 제공했고 노동자 운동이 이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다음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나에게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아무것도 아니며, 운동이 전부다.” 노동조합원이 계속 증가하고 사민당에 투표하는 것이 필요한 전부라는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자본가들의 모든 이윤을 점진적으로 장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 운동을 “시시포스의 노동”으로 묘사했다. 이 표현은 노동조합 운동을 단순히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작고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시시포스의 근육이 틀림없이 튼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룩셈부르크의 지적은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편에서는 노사 대표자들의 협상을 통해 영구적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개혁주의 사상을 반박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전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신디칼리즘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룩셈부르크는 정치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예지적인 주장을 했다. 수정주의를 따르면 우리의 강령은 사회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개혁이 될 것이라고 옳게 예측했다. “정치권력 장악과 사회혁명 대신에 그리고 그것과 대비시켜 입법 개혁이라는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향한 더 평온하고 느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근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독일 사민당 안에서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룩셈부르크의 운동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했다. 1898년과 1899년, 특히 1901년에 베른슈타인의 이론은 독일 사민당 당대회에서 철저히 반박당했다.

사민당의 핵심 지도자인 카를 카우츠키도 처음에는 룩셈부르크를 편들며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카우츠키는 1910년에 룩셈부르크의 혁명적 지향성이 독일 사민당 내에서 주변화되도록 작업했다. 이 무렵 룩셈부르크와 카우츠키는 노동계급이 권력에 이르는 길을 놓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했다.

그 결과, 독일 사민당은 점차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개혁주의자, 말로는 급진주의를 유지했지만 의회적 투쟁 방식에 머무른 카우츠키가 이끄는 중간주의자, 룩셈부르크의 혁명적 진영 등 세 경향이 존재하게 됐다.

원천

아무튼 독일 사민당 안에서는 혁명적 입장이 최종 패배했다. 이것은 기회주의의 뿌리가 룩셈부르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기회주의 이론이 “우리 당에 들어 온 프티부르주아 요소가 우세하도록 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일 뿐”이라고 했다.

외부로부터의 감염은 쉽게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개혁주의를 발명하지 않았다. 베른슈타인은 개혁주의를 출판한 잘못된 저질렀을 뿐이다. 이그나츠 아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민당 내

혁명적 좌파인] 로자 [룩셈부르크], [프란츠] 메링, [알렉산드르] 파르부스 때문에 조용해진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들이 설파한 엄격한 전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단 한 명도 없다.”

개혁주의의 뿌리는 두 원천이 있었다. 첫째, 베른슈타인은 프티부르주아 지식인이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들은 4000명에 이르는 독일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관료였다. 이것은 개혁주의적 오염의 주된 원천이 사민당 조직 밖이 아니라 그 조직의 핵심에 있었다는 뜻이다.

둘째, 개혁주의가 프티부르주아 지나 노동조합 관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자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관료가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민당의 타락 과정은 지속됐고, 제국주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황제를 편든 1914년 8월 4일에 극도에 달했다.

불균등

룩셈부르크도 이런 사민당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수정주의의 원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수정주의에 이론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더해 그 주장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론적 비판과 대중 투쟁의 급진화 효과가 결합되면 개혁주의를 패퇴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룩셈부르크는 (너무 늦게까지) 사민당이 아닌 다른 당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잘못됐

다. 무엇보다, 노동 관료 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와 지위가 사민당을 혁명적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1918~1923년 독일 혁명에서 입증됐다.

둘째, 룩셈부르크는 노동자 대중에 대한 개혁주의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했다. 즉, 노동자 대중이 투쟁 경험을 통해 과거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의식은 훨씬 불균등하다. 그래서 혁명적 대안은 혁명적 소수를 조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레닌주의 노선에 따른 혁명적 정당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약점이 《사회 개혁이나 혁명이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룩셈부르크는 개혁과 혁명의 관계를 분석해, 노동계급이 벌이는 일상적·구체적 투쟁에 정치적 의미와 중요함을 부여했다. 또, 룩셈부르크는 노동운동의 주류에 초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반대했다. 종파주의에 맞선 룩셈부르크의 투쟁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의 노동운동 속에서 활동하는 혁명가들에게 초석이 될 수 있다. 개혁주의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개혁주의에 맞서 원칙 있게 투쟁하자.

[더 읽을 거리]

-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 — 마르크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마이크 곤살레스, 이언 버철, 샐리 캠벨, 에스미 추나라, 크리스 뱌버리, 책갈피, 2015, 352쪽, 14000원
- 《사회민주주의 전통과 사회주의》, 최일봉, 노동자연대, 2015, 71쪽, 3000원
-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 토니 클리프, 책갈피, 2014, 160쪽, 8000원



사진 출처: Myanmar Now

더욱 거세진 미얀마 군부의 공격 — 무장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김준호

미얀마(버마) 군부 쿠데타와 그에 맞선 항쟁이 한 달을 넘긴 3월 둘째 주, 상황은 더한층 엄중해졌다.

3월 8일 새벽에 군부는 미얀마 주요 대도시 10여 곳에서 관공서·대형병원·전력국·기차역 등 기간 시설들을 기습 점거했다. 9일에는 미얀마 현지 저항 소식을 보도한 언론사 다섯 곳을 폐쇄했다. 청년들이 부상자 치료와 거리 시위 조직 거점으로 사용하는 대학 캠퍼스들을 폭력 침탈하기도 했다. 군부는 백주 대낮에 유혈낭자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현재까지 약 80여 명이 진압으로 사망했다.

인권 유린으로 악명 높은 군부대들이 공공연히 진압에 투입됐다. 그중에는 2017년 로힝야 무슬림 학살에 앞장선 33경보병사단, 2007년 반(反)독재 항쟁 때 시위대를 학살한 77경보병사단도 있다.

군부가 2월에 새로 조직한 시위 조직자 색출 전문 부대인 “보안대”는 영향도 없이 주택·건물들에 쳐들어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 대중 저항에 부딪혀 정국을 온전히 장악하는 데에 실패해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군부는 (선거 등) 사태 “정상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바꾸려고 군부는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맞서는 미얀마 청년들의 투지

는 놀랍다. 이들은 유혈 진압에도 매일 거리 시위를 벌이고, 몇몇 대도시에서는 지역 자경단을 조직해 폭력 침탈에 맞서고 있다.

이제 그런 투지를 조직적 정당방위에 쏟아야 한다.

한편, 3월 8일에 하루 총파업이 벌어졌다. 쿠데타 후 한 달 새 세 번째다. 이날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상업 지구 대부분과 주요 기관들이 마비됐다. 양곤 지역 노동조합들의 연맹인 ‘양치오노동자협회’의 사무총장 모 수에는 이날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 최소 55퍼센트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양곤·만달레이 등 미얀마 대도시 네 곳에서는 “총파업위원회”가 이날 파업을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조직 운동인 ‘시민불복종행동’(CDM)과 지역 노동조합들이 주축이 된 것이다.

군경은 파업을 혹독하게 공격했다. 최루탄, 시위 진압용 고무탄, 섬광탄뿐 아니라 실탄도 발사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 불도저를 끌고 와 노동자들이 친 바리케이드를 밀어 버리기도 했다.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노동자들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한 방어 조직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무제한으로 계속하면 압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힘

하지만 군부에 맞선 운동에 영향력이 큰 아웅산 수치가 민족민주동맹(NLD)은 대중 저항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

3월 초 민족민주동맹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한 의원들을 규합해 일종의 임시 국회인 ‘연방의회대표자위원회’(CRPH)를 세웠다. 이 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국제 사회”, 즉 미국을 중심으

로 한 강대국 정부들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민족민주동맹은 대중 저항을 자제 시키려고 쿠데타 직후부터 줄곧 애써 왔다. 군부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제 사회”의 개입에 도움이 안 되고 쿠데타 측에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미얀마 역사는 대중 운동 ‘자제’의 대가를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피로 치러 왔다는 점을 보여 준다.(관련 기사 본지 357호 ‘미얀마와 민주주의 투쟁’)

막상 민족민주동맹이 기대를 거는 “국제 사회”는 주판알 뱅기기에 열심이다.

3월 5일에 미국 상무부는 미얀마 군부와 군부가 운영하는 대기업 미얀마 경제공사(MEC)·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쿠데타를 저지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고압적 표현과는 달리 제재 수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마저도, 전직 미국 상무부 수출 담당 차관이 밝혔듯 “교역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로이터》)이다.

미국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신속하게 무더기로 강력 제재를 퍼부어 온 이력에 비춰 보면, 온도차가 느껴지는 접근이다.

이는 미국이 지정학적 득실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중국과 거리를 좁

히게 될까 우려한다.

한편, 미얀마 군부가 중국과 한통속이라는 생각도 적잖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관계는 그보다 복잡하다. 이는 오늘날 미얀마 자본주의가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후원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훨씬 덜 고립돼 있는 것과 연관 있다.(관련 기사 본지 355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참여해진 미·중 갈등 속에서 바라본 미얀마 쿠데타’)

중국의 최우선 고려사항도 지정학적 이해관계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뿐 아니라 아웅산 수치나 민족민주동맹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왔다. 오히려 아웅산 수치가 중국과 지나치게 거리를 좁히려 하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가디언》)

이들 모두의 우선순위에 평범한 미얀마인들은 없다.

“국제 사회”가 미얀마인들에 민주주의를 선사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타이 사회주의자 자일스 자이 웡파콘의 지적처럼, 그런 기대에는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으로 독재자를 타도할 수 있다는 관점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관련 기사 본지 355호 ‘미얀마: 군사 정권은 대중 운동으로 분쇄해야 한다’)

변화의 진정한 동력은 미얀마인들 자신의 단호한 대중 저항에 있다. 미얀마 저항 운동은 군부에 맞서 정당한 자기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장한 채 거리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군부, 병원과 대학 캠퍼스를 폭력 침탈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RFA, Burmese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_____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5만 원 | ☐ 기타 () 원(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_____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이메일 _____

농협 301-0010-1643-71

구독기간 ☐ 1년 | ☐ 2년 | ☐ 2년 이상 ()년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늘어나는 국가 부채, 부자들이 갚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부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각국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 지출을 메우려고 차입하는 막대한 금액 때문이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리시 수낙이 2020~2021년에 팬데믹 대응에 3440억 파운드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소득의 16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에 정부 차입은 355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공공부채는 2020년대 중반까지 국내총생산의 97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전의 73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영국과 미국에서 새 부채의 대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형태를 띤다. 중앙은행이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사실상 찍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그러나 자유시장 정설 이론의 중심 기동인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화폐를 더 찍어 내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중앙은행들이 2007~2008년 공황에 대응해 “양적 완화” 정책(금융 시스템에 돈을 추가로 풀기 위해,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시작한 이래 초월신자유주의자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줄곧 예상해 왔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더 주류적인 인물들이 동일한 예측을 하고 있다. 전 미국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바이든의 1조 9000억 달러짜리 재정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더 중요한 점은 거대한 세계 국채 시장이 마치 여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올해 주요

국채 가격은 급격하게 폭락했다. 채권은 보유자에게 고정된 수입을 약속하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상승한다. 10년짜리 미국 재무부 채권 수익률은 1퍼센트 미만에서 1.6퍼센트로 급증했다.

국채 수익률은 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를 압박한 채권 투자자들을 가리켜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경제학자 에드 야데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범람하는 멋진 신세계를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세계에서 채권 자경단이 번성하는 것이다. ... 그들의 임무는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법도를 무시할 때 법과 질서를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일부 상품(특히 석유와 구리)의 가격이 상승했다. 백신 출시에 힘입어 팬데믹이 빠르게 종식되고 거대한 호황이 찾아와서 지난해 손실된 산출을 만회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빠르게 백신이 보급되는 나라는 소수일 뿐이다. 세계경제의 핵심 제국주의 세력인 유럽연합조차 백신 보급을 그르치고 있고, 미국도 백신 접종이 매우 불균등하다. 개발도상국들은 훨씬 암울하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전 세계를 포괄하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는 1990년대보다 국채 시장을 덜 두려워하는 것 같다. 중앙은행은 그 시장을 관리하는 데 익숙해졌다. JP모건의 로버트 미셀은 미국 연방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도이사회가 매달 12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매입한다고 지적한다. “언젠가는 ... 수익률이 너무 높아질 것이지만 중앙은행의 끊임없는 국채 매입이라는 균형추가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자산 매입은 쉽듯이 계속된다. 여기에 대항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누적되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는 그것을 감당해야 할 생산 경제의 상태에 결국 달려 있다. 그런 견지에서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주요 경제들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이미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당 핑의원들의 대처주의적 본능을 거슬러 수낙이 내놓은 대답은 잘못된 것이다. 수낙은 기업에 물리는 세금만 올린 것이 아니라, 세금 환급률을 동결해 평범한 임금 소득자에게 물리는 세금도 늘렸다. 정부가 NHS 노동자들에게 모욕적이게도 1퍼센트 임금 인상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경제 회복이 다가오면 수낙은 또 긴축 정책을 취할 것이다. 부채 문제와 그 부채를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5호 / 번역 최병현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 한미연합훈련 실시, 대북 전략 공조
문재인과 바이든의 대북 협력은 불안정만 더 부추긴다

★ 네이버 ‘실검’ 폐지
여론 조작에 이용돼 온 실검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한다

wspaper.org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식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속보이고 미흡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인의 공정 약속은 LH와 제3기 신도시 사건으로 완전히 파산했다. 정부가 박근혜 시절부터 LH 내부 투기를 조사하겠다고지만, 그런다고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환멸이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3월 2일 이 일을 최초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LH 직원 14명과 가족, 지인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과 시흥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땅을 매입했다. 월세도 나올 것이 없는 빈 땅에 무려 58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를 한 것이다. 이 지역이 개발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투자를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2018년 12월이었고, 광명·시흥 지역을 3기 신도시에 포함시킨 것은 올해 2월이었으니, 이들이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LH 직원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실명 거래를 한 것을 보면, 이들은 초파일 확률도 있다. 부패 행위에 임원도 아닌 직원이 이렇게 무감각한 것은 이런 부패가 더 고위직부터 행해진 관행이었음을 암시한다.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샀을 것”이라고 자신이 LH 사장일 때 투기를 한 이들을 두둔했다. 이런 부패가 관행이고, 자기가 편히 사장 노릇하려고 그런 관행을 눈감아 줬다는 뜻으로 보인다.



환멸과 분노 집값 잡겠다고더니 부동산 폭등 부추기며 잇속 챙겨 온 정부 공직자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변창흠을 여전히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앉혀 두고 있다. 문재인은 폭로 초기에 부패의 한 축일 가능성이 높은 국토부가 중심이 돼 조사하도록 했고, 3기 신도시가 사전 정보를 이용한 조직적 투기판이 된

것이 매일 확인되고 있는데도 개발 강행을 외친다. 조직적 투기 세력에 대한 수사도 막아 주고 이익도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폭로를 계기로, 신도시 관할 지역 공무원이나 시의원, 심지어 국회의

원 양이원영의 모친 땅 투기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도 또 다른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둔 일과, 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의 부인이 시흥시 땅을 쪼개기 계약한 것도 보도됐다.

신도시 개발 때마다 불거진 투기

사실 이런 종류의 부정·부패 문제는 신도시 개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노태우 정부 때 추진한 1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 때의 2기 신도시에서 모두 개발 정보 사전 활용, 로비성 특혜 분양 등 공직자와 부자들이 연결된 부패 사건이 벌어져 138명이 구속됐었다. 개발 정보를 가장 확보하기 좋은 사람은 바로 개발 지역의 결정권자다. 정부와 관련 공기업들의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 등이 가장 먼저 의심받아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기업들이나 자산가들과 연결돼 투기를 위한 공급 확대 압력을 정부 안팎에서 창출해 낸다.

정보 유출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정보가 유출되며 이런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은 상당히 존재했다. 이미 2018년 9월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 신창현이 과전을 포함한 수도권 8개 지역을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정보를 흘렸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고양 창릉에서는 도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LH 직원이 대외비였던 ‘고양

권 동남권개발계획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넘겼고, 이 사진은 정부가 신도시 발표를 하기 전에 부동산업자·분양사업자 등을 거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까지 올라와있다. 그러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광명·시흥뿐 아니라 정부가 2018~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5곳에서도 정부 발표 직전에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2018년 12월에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일대의 토지 거래량은 그해 9월에서 11월 사이 무려 5배로 늘었다. 그리고 모두 예상하듯이, 이들 지역의 땅값은 개발 계획 발표 뒤에 확 뛰었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단지 일부 개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적 부패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3기 신도시가 현 정부가 계획한 것이므로 이번 부패 의혹에서 현 정부의 고위 인물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미 2019년에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혐의 중에도 정부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자 건이 있었다.

말뿐인 “발본색원”

문재인 정부는 “발본색원”, “패가망신” 운운하며 엄정 대응 엄포를 놓지만 실제 지시는 미적지근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큰 국토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켰다. 의혹이 제기된 후 일주일간이나 이런 “셀프조사”를 벌이며 증거인멸 시간만 벌여 준 것이다.

뻔한 사기극에 공분이 일고,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사퇴 후 지지율이 오른 윤석열이 정부의 조사 방침이 허술하다고 공개 비판하자, 정부는 이번 주 들어서 다급하게 경찰청 산하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와 같음을 빙고 있는 검찰을 배제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있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파견받았다. 감사원 감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솜방망이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시흥시의원이 3기 신도시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자녀 명의로 시흥시 괴림동 임야에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자진 탈당을 수용했다. 이미 전 부산시장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투기 의혹과 가덕도 공항 건설의 연관성,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를 감싼 일

등 민주당도 부패 문제에서 원조당인 국민의힘과 만만찮다.

심지어 민주당은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부동산 보유 현황 자진신고로 바뀌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고, 친노의 좌장이었던 이해찬의 지역구였다. 그동안 가장 부동산 가격이 높게 뮴 신도시이기도 하다.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다.

무엇보다 사전 정보를 활용한 투기이므로 개발 계획을 다루는 부처와 투기 대상 지역(제3기 신도시 전역)의 토지 거래부터 초기에 강력 수사를 하는 상식적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의혹과 불신의 초점이 되고 있다. 증거인멸 시간만 벌여 줬다는 비판은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한탄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비판처럼 ‘LH 사태’ 관련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은 “다거짓말”인 것이다.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 위에 싹튼 투기와 부패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투기에 상당수 정부·여당 인사들과 정관계 인사

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권 부패를 수사 지휘하다가 갈등을 빚고 사퇴한 윤석열의 지지가 오르고 있다. 윤석열은 10일에도 이번 사건이 공정의 문제라고 문재인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문재인이 초기부터 강력 수사로 가지 않은 것이나 검찰을 초기에 배제했던 일 등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와 처벌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재인인의 검찰 개혁 전체가 의심받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은 한사코 이 문제를 LH 직원들의 일탈적 비리로 몰아가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낳은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한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도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투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우긴다.

민주당이나 우파나 모두 이런 부패가 형성될 조건을 만들어 왔다. 그들 자신이 그 조건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부동산을 경쟁적 투기 시장으로 만들어 온 것은 역대 정부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것이 현 정부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는다.

부패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하려면 부패를 낳은 질서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여당의 부패가 더 크냐 야당의 부패가 더 크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